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권혁진**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에 대한 빈곤평가의 문제 : SPD(Sequential Poverty Dominance)방법을 중심으로
- 황진영**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정치적 영향 : OECD 국가 간 실증분석
- In-Young Jung** Explain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Social Policy in Korea : The Cas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엄기욱** 일본 거주 외국인 영주자의 사회복지 수급권에 관한 연구
- 신영전 | 손정인** 미 총족의료의 현황과 관련요인 :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 신호성 | 정기혜 | 윤시론 | 이수형**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 예측
- 석재은**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 요인
- 한삼성 | 강성욱 | 유왕근 | 피영규** 노인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 다층모형(HLM)을 통한 개인과 지역요인 분석
- 이건직**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서 평** 강신욱 : 인간의 심리, 야수의 성정(性情), 그리고 경제위기
강은정 : The Politics of healthy policies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정치적 영향: OECD 국가 간 실증분석

황진영

(한남대학교)

본 연구는 1995~2003년 기간의 20개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국가별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 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득수준,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를,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선거제도, 정부의 형태 및 선거의 유무를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비례대표제(선거제도)와 결합하는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주요용어: 사회보호, 경제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OECD 국가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B00148).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투고일: 2009. 2. 23

■ 수정일: 1차: 2009. 3. 17, 2차: 2009. 4. 27

■ 게재확정일: 2009. 4. 30

I. 머리말

최근 급격한 사회의 환경 변화로 인해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사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가족구조의 변화(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내 보험 관계의 악화 등) 등과 같은 사회의 환경 변화가 구성원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사회보호에 대한 재정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¹⁾

정부의 사회보호 지출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승훈(2006), 최준욱 외(2005), 황진영(2007a), Congleton & Shughart(1990), Dreher(2006), Hicks & Swank(1992), Roseveare et al(1996) 등은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등과 같이 경제사회적 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사회보호 및 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의 일반적인 결과는 세계화 및 고령화 진전 속도가 빠르며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소외된 계층이 증가하므로 사회보호 및 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러나 선행의 실증적 연구결과가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논의를 반영해야 하며, 이 점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다소 보완하는 실증적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사회보호 및 복지 지출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한 경제사회적 변수들은 사회보호에 대한 수요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의 진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은 사회보호에 대한 공공의 욕구의 변화를 반영한다. 즉 경제 환경의 변화로 소외된 계층이 투표에 많이 참석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는 사회 보호와 관련된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선호(혹은 수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보호 지출 수준은 수요측면의 요인 뿐 아니라 정치인의 선호의 변화에 따른 공급측면의 요인에 의해서

1) 재정정책의 목표와 이론에 관한 철학적 배경은 Bailey(2004)를 참조할 수 있다.

2)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사회보호 지출의 크기는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Esping-Anderson(1990)은 선진 복지국가를 크게 주요 사회복지 대상, 공공사회보장체계, 사회권의 인정, 재분배의 정도 등에 따라 영미형(앵글로색슨형 혹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영국 등), 대륙형(대륙유럽형 혹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프랑스·독일·이태리 등), 북구형(스칸디나비아형 혹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의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사회보호 지출의 크기는 북구형, 대륙형, 영미형의 순서대로 나타난다.

도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더 많은 득표를 획득하기 위해 가난한 계층이 증가할수록 사회보호 및 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Castles(2004)에서 사회보호와 관련된 재정지출의 공급측면을 반영하는 요인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Portrafke(2006)는 15개 OECD 국가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즉 정부의 형태, 선거의 유무, 집권 정당의 체류 등)이 재정지출의 기능별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Portrafke(2006)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재정지출의 공급측면만을 고려할 뿐 이들 요인들과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한 수요측면과의 상호연관성은 무시하였다. 아울러 정치적 요인으로 최근 Austen-Smith(2002), Milesi-Ferretti et al(2002), Verardi(2005) 등의 연구에서 강조한 선거제도(electoral system)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선거제도 포함)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들 변수들이 사회보호에 대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의 사회보호 지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는 극히 제한적인 OECD 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이용하였다. 왜냐하면 동일한 방법 및 기관에 의해 측정된 국가별 사회보호 지출 수준에 대한 패널(panel) 자료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 같이 경제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국가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OECD(2006)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한 2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비교적 최근인 1995~2003년 기간의 패널 자료를 이용한다. 이러한 최근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1990년대 말 이후 많은 OECD 국가에서 변동하고 있는 사회보호 지출의 크기를 반영할 수 있다.³⁾

또한 대부분 선행의 실증분석에서 국가별 사회보호 지출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호(혹은 복지부문) 지출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 지출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⁴⁾ 다시 말해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중요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과의 상대적 크기로 파악해야 한다. 이 점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 지출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동시에 검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5~2003년 기간의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사회적

3) 실질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유럽 국가의 사회보호 지출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다(황진영, 2007b).

4) 복지지출이 경제사회적 여건의 결과인지 혹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의 차이에 의한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전승훈(2006), 최준욱 외(2005) 등은 Heller & Diamond(1990)의 연구에서 사용한 IEC(International Expenditure Comparison) 지수를 사용한 복지지출의 국제비교를 행하였다. 여기서 IEC 지수는 분야별 재정지출의 실제 값(real value)을 회귀분석을 통해 구해진 분야별 재정지출의 예측된 값(fitted value)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점에 대한 요약은 황진영(2007b)을 참조할 수 있다.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에 대한 재정지출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한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절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자료의 설명과 함께 추정방정식, 추정방법 등을 기술한다. 제Ⅳ절에서는 OECD 국가 간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제Ⅴ절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의 설정

한 국가의 분야별 재정지출 중에서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분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사회적 요인은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과 같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수요측면의 결정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사회보호에 대한 공공의 욕구는 증진된다. 이 점은 유명한 바그너 법칙(Wagner's law, 1883)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화, 인구증가, 도시화 등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복지 증진과 함께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어 교육·문화·사회보호와 관련된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된다.⁵⁾ 그러나 바그너 법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소득수준이 유사한 20개 OECD 국가를 표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분배적 재정지출 간의 관계는 김의섭과 황진영(2006), 류덕현(2008), Congleton & Shughart(1990), Dang et al(2001), Ferris & West(1996), Preston(1984), Turner(1984) 등 다양한 연구에서 검토되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한 국가의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사회보호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켜 재정지출 규모를 팽창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원이 사회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압력단체(pressure group)로서의 노년층 인구가 투표권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켜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 진전과 사회보호 지출 간에는 양(+)의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다시 말해 바그너의 법칙에 의하면 교육·문화·사회보호와 관련된 재정지출의 소득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진다.

또한 소외된 계층이 증가할수록 투표자들은 사회보호 지출과 같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을 선호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져 소외된 계층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높은 수준의 사회보호 지출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호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제사회적 변수로는 세계화의 진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과 사회보호 지출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Hicks & Swank(1992), Rieger & Leibfried(2003) 등의 연구에서 세계화 진전은 사회보호나 복지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증대시켜 더 많은 재정확충을 요구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Schulze & Ursprung(1999)의 연구에서는 국제교역이 증가할수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비용과 수출가격을 낮추어야 하며, 이는 조세삭감 및 사회보호와 같은 복지지출을 감소시키려는 압력이 커지게 됨을 보였다. 결국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존의 복지국가들이 '최소복지국가'(minimalist welfare state)로 전환되며, '바닥으로의 질주'(race to the bottom)가 나타나게 된다(Castles, 2004; Rhodes, 1998 등).

한 국가의 세계화 진전을 계량화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세계화가 사회보호 혹은 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도 상반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Hicks & Swank(1992)는 세계화가 사회보호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 반면 Garrett & Mitchell(2001)은 세계화가 복지지출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⁶⁾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의 한 특장인 무역 개방도의 정도가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사회보호 지출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들은 정치인들의 선호 혹은 그 변화를 반영한다. 즉 정치인들은 보다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득표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보호 지출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은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공급측면을 강조한 결정요인이다. 정치적 요인의 예로는 선거제도, 정부의 형태, 선거의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입법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크게 다수대표제(majority representational system)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al system)로 나눌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입법자를 결정하고 현재의 입법자가 재선을 추구한다면, 선거지역의 크기에 따라 입법자가 선호하는 정책은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지역의 크기가 클 경우 입법자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6) 최근 황진영(2007a)은 OECD 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세계화 지수(Dreher(2006)에 의해 제공된 자료)가 사회보호 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모든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작은 선거지역에서의 입법자는 그 지역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적 정책결정을 더 선호할 것이다.

예를 들어 Austen-Smith(2002), Milesi-Ferretti et al(2002), Verardi(2005) 등의 연구에 의하면 비례대표 선거제도에서 재분배적 조세정책에 더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이전지출의 비율이 높을 수 있으며, 양당제하의 다수대표 선거제도에서 정치인들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바꾸어 말하면 선거지역이 큰) 국가 혹은 기간에서의 정치인들이 사회보호 지출과 같은 재분배적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정당이론(partisan theory)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진보당은 실업문제나 이전지출 등에 더 관심을 가지는 반면 보수당은 물가안정을 더 중요시한다(황진영, 2005). 또한 Tavares(2004)는 1960~1995년 기간의 16개 OECD 국가 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형태가 재정의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대부분의 좌파 정부는 조세를 증가시키고 우파 정부는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좌파 정부가 집권한 시기에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또 다른 정치적 요인으로 선거의 유무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선거 득표를 위해 경제를 조작한다는 정치적 경기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Nordhaus, 1975; Rogoff & Sibert, 1988 등). 즉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거 직전에 경기 부양정책을 실시하여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려 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 직전에 재분배적 재정지출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Portrafke(2006)는 선거 연도와 선거 전년도 연도별 더미변수를 사용한 실증분석에서 이러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관측하였다. 따라서

표 1.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의 예상된 효과

요 인		예상된 효과	측정치
경제사회적 요인	소득수준	?	실질 1인당 국내총생산(GDP)
	고령화 정도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실업률	+	총 노동력 대비 실업자의 비율
	무역 개방도	?	(수입+수출)/GDP
정치적 요인	선거제도(비례대표제)	+	평균 선거지역의 크기
	정부의 형태(좌파 정부)	+	좌파 정부가 집권한 연도별 더미
	선거의 유무	?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선거 전년도 더미

주: (+)와 (?)는 각각 사회보호 지출과 그 결정요인 간에 양(+)의 관계 및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이론 혹은 실증적 결과가 존재함을 나타냄.

사회보호 지출에 한정할 경우 선거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의 유무를 나타내기 위해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전년도에 대한 연도별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즉 <표 1>은 사회보호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예상된 효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각 결정요인과 사회보호 지출 간에 양(+)의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는 두 변수(각 결정요인과 사회보호 지출) 사이에 상반된 이론 혹은 실증적 결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III. 자료와 추정방정식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민계정(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통계는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SNA 통계는 통계편제 방식이 SNA 1986 기준에서는 정부의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를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SNA 1993 기준에서는 COFOG를 일반행정·국방·공공질서 및 안정·경제사업·환경·주택 및 지역개발·보건·오락, 문화 및 종교·교육·사회보호와 같이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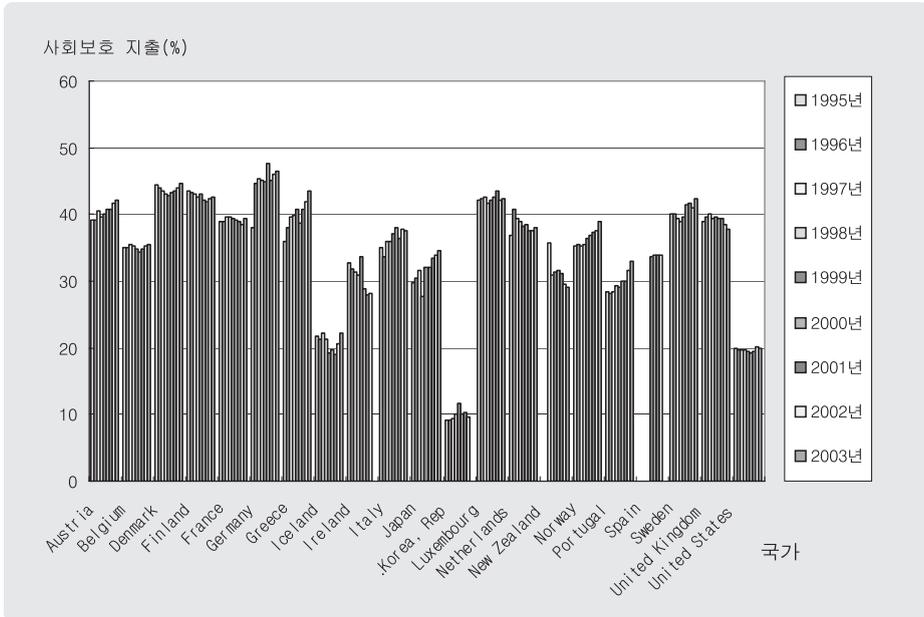
한 국가가 분야별 재정지출 중에서 사회보호 지출에 부여하는 중요도(즉 정부정책의 우선 순위)의 정도는 ‘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 지출의 비율’(이후 SPR로 나타냄)로 측정할 수 있다. OECD(2006)에서는 1993~2005년 기간의 OECD 국가별 총 재정지출을 자국 화폐단위로 나타낸 총액수와 함께 COFOG에 근거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총액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06)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1995~2003년 기간의 21개 OECD 국가에 대한 SPR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표본의 대상인 국가 및 기간의 선정은 가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즉 SNA 1993 기준으로 1995년 이전과 2003년 이후의 자료는 극히 제한적인 국가에서만 가용하였으며, 몇몇 OECD 국가의 자료는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국가별·연도별 SPR 자료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대한민국·미국·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SPR은 약

7) 분야별 재정지출의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2006)는 물론 박형수(2005), 전승훈(2006), 황진영(2007b)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 사회보호 지출의 추이, 1995~2003년



30% 혹은 그 이상을 나타낸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1995~2003년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도별 SPR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통치체계의 효율성이 높은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호 지출의 변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보호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소득수준은 '구매력으로 추정된 실질 1인당 GDP'(이후 PGDP로 나타냄)로, 인구의 고령화 정도는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후 OAG로 나타냄)로, 실업률은 '총 노동력 대비 실업자의 비율'(이후 UNE로 나타냄)로, 무역 개방도는 'GDP 대비 무역량(수출+수입)의 비율'(이후 TRD로 나타냄)로 나타낸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SPR과 동일한 연도의 시계열 자료로 World Bank(2006)에서 제공한 것이다.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국가의 입법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에 가까운지 혹은 다수대표제에 가까운지를 나타내기 위해 평균 선거지역의 크기(Mean District Magnitude, 이후 MDM으로 나타냄)를 사용한다. 이는 한 국가의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평균수'로 정의할 수 있으며, MDM이 큰 값을 나

타내는 국가일수록 비례대표제와 결합된다.⁸⁾ 이러한 자료는 World Bank의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에서 제공한다.⁹⁾

국가별 정부의 형태와 선거의 유무를 나타내기 위해 좌파 정부가 집권한 연도에 대한 연도별 더미변수(이후 DLG로 나타냄)와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 전년도에 대한 연도별 더미변수(이후 DPE로 나타냄)를 사용한다. 이러한 자료는 Portrafke(2006)와 IFES(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¹⁰⁾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이상의 출처에서 가용하지 않은 소수의 국가와 연도의 자료는 인터넷에 제공된 각 국가의 정보에 근거하여 수집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자료들도 SPR과 동일한 1995~2003년 기간의 시계열 자료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

$$\log(SPR)_{it} = c + \alpha_1 \log(PGDP)_{it} + \alpha_2 \log(OAG)_{it} + \alpha_3 \log(UNE)_{it} + \alpha_4 \log(TRD)_{it} \\ + \beta_1 \log(MDM)_{it} + \beta_2 DLG_{it} + \beta_3 DPE_{it} + \varepsilon_{it}$$

여기서 하첨자 i 와 t 는 국가와 연도; c 는 상수항; α_j ($j = 1, 2, 3, 4$)와 β_k ($k = 1, 2, 3$)는 추정된 설명변수들의 계수 값; ε 는 오차항(error term)을 의미한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의 실증분석에 기초한 추정된 설명변수들의 계수 값에 대한 예상된 부호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추정방정식에서 더미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를 취한 값을 사용하는데, 이는 설명변수가 한 단위 변화함에 따른 효과가 아닌 백분율(%) 변화에 따른 효과(즉 추정된 탄력성)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추정방법으로는 ‘통합한 최소제곱법’(Pooled Least Squares: Pooled LS)과 ‘표면상 무관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을 사용한다. Pooled LS를 사용할 때 통계적 추론을 위한 t -값들은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비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패널 자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자료의

8) 선거제도와 관련된 많은 문헌(예를 들어 Milesi-Ferretti et al, 2002; Verardi, 2005)에서 비례대표제 혹은 다수대표제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MDM을 사용하였다.

9)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eck et al(2001)을 참조할 수 있다.

10) IFES는 미국 국제 개발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후원으로 발족한 기관이며, 1998년 이후 전 세계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국민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성상 패널 분석의 일반적인 형태인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이나 랜덤효과(random effect) 모형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즉 1995~2003년 기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형태가 동일(왜냐하면 더미변수로 나타내었기 때문임)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역시 쉽게 변동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 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변수들과 오차항의 영구적인 요소 사이의 강한 독립성을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으므로 랜덤효과 모형을 사용한 추정치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추정방법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기 위해 SURE를 사용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기 추정방정식에서 9년에 대한 오차항들의 동시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의 종속변수(SP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격은 1996년, 1997년 및 여타 다른 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방정식(multiple equation) 형태로 추정한다. 이 경우 9년에 대한 상수항의 고정효과(fixed effect)를 고려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Pooled LS를 사용하여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그림 1]에 나타난 21개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20개 국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대한민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SPR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¹¹⁾ 또한 아일랜드는 2003년, 뉴질랜드는 1995년과 1996년 및 스페인은 1995~1998년과 2003년의 자료가 동일한 출처로부터 가용하지 않았으므로 총 관측치의 수는 172개(=180개(20개국×9년)-8개)가 된다.

<표 2>의 모형(A)은 경제사회적 요인만을 설명변수로 고려한 추정결과이며, 모형(B)~(D)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함께 정치적 요인을 하나씩 추가적으로 통제한 추정결과이다. 또한 모형(E)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형태의 모형을 분석한 이유는 국가 간 분석에서 흔히 생겨날 수 있는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11) 이하에서 설명하겠지만, 표본에 대한민국을 포함할 경우에도 전체적인 추정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표 2. Pooled LS를 사용한 추정결과

(종속변수: log(SPR))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모형(E)
상수항	-0.77(-1.16)	-1.95(-3.24)+	-0.80(-1.16)	-0.75(-1.13)	-1.95(-3.20)+
log(PGDP)	0.07(1.13)	0.20(3.38)+	0.07(1.14)	0.07(1.13)	0.20(3.41)+
log(OAG)	0.99(10.17)+	0.95(11.20)+	0.98(10.09)+	0.99(10.16)+	0.94(11.34)+
log(UNE)	0.10(2.82)+	0.17(5.06)+	0.10(2.83)+	0.09(2.77)+	0.17(5.11)+
log(TRD)	0.18(7.42)+	0.11(4.36)+	0.19(7.32)+	0.18(7.26)+	0.11(4.11)+
log(MDM)		0.06(6.12)+			0.06(6.07)+
DLG			0.01(0.30)		0.004(0.15)
DPE				-0.01(-0.59)	-0.02(-0.95)
R2	0.56	0.63	0.56	0.56	0.64
총 관측치 수	172	172	172	172	172

주: 1) PGDP는 실질 1인당 GDP, OAG는 고령인구비율, UNE는 실업률, TRD는 무역 개방도, MDM은 선거지역의 크기, DLG는 좌파 정부의 연도별 더미, DPE는 선거 전연도의 연도별 더미를 의미함.

2) 괄호 안의 수는 t -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 -값들은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됨.

3) (+)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OAG, UNE 및 TRD 추정계수는 SPR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의 OAG 추정계수는 매우 큰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통계적 유의성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OAG가 1% 포인트만큼 증가하면 다른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한 상황에서 SPR이 0.94~0.99% 포인트만큼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정도와 실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또한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보호 지출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Hicks & Swank(1992), Rieger & Leibfried(2003) 등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PGDP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로 관측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AG 추정계수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와 사회보호 지출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재정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

으로 사료된다.¹²⁾ 사실상 대한민국을 표본에 포함시켜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 전체적인 결과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은 더욱 증가하였다.¹³⁾

정치적 변수로는 MDM 추정계수만이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입법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의 정치인들이 사회보호 지출과 같은 재분배적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가 크게 나타난다는 Austen-Smith(2002), Milesi-Ferretti et al(200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MDM이 1% 포인트만큼 증가하면 다른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한 상황에서 SPR은 0.06% 포인트만큼 증가한다. 즉 MDM의 추정된 탄력성(estimated elasticity)은 0.06이다. 이러한 MDM의 탄력성은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들의 추정된 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DLG와 DPE의 추정계수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전통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므로 <표 2>의 추정결과는 20개 OECD 국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보호 지출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함에 있어 경제사회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인 20개 OECD 국가들은 통치체계 혹은 거버넌스(governance)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므로 재정지출의 구성이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 크게 변동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호 지출이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9년에 대한 오차항들의 동시 연관성을 고려하여 SURE 방법을 사용한 추정결과는 <표 3>과 같다. 만약 추정방정식의 오차항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SURE 모형의 추정결과는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 이때 9년에 대한 상수항의 고정효과를 고려하였으며, <표 3>에서는 이러한 상수항에 대한 추정계수들은 생략하였다.

<표 3>의 결과는 <표 2>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계수의 크기 및 그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PGDP를 제외한 일련의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SPR에 전통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¹⁴⁾ 예를 들어 OAG와 TRD의 추정된 탄력성은 각각 0.87~0.92와 0.08~0.13을 나타냈다. 또한 MDM 추정계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12)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연금제도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자동적 증가(automatic increase)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3) 이러한 추정결과는 저자에게 요구하면 얻을 수 있음.

14) 다만 모형(C)의 UNE 추정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 유의수준을 조금 초과한다.

표 3. SURE를 사용한 추정결과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모형(E)
log(PGDP)	-0.03(-0.46)	0.02(0.26)	-0.03(-0.40)	-0.06(-0.85)	0.01(0.12)
log(OAG)	0.88(9.00)***	0.92(9.49)***	0.87(8.64)***	0.88(9.17)***	0.90(9.36)***
log(UNE)	0.04(1.78)*	0.06(2.18)**	0.03(1.56)	0.04(1.66)*	0.04(1.68)*
log(TRD)	0.13(3.93)***	0.09(2.63)***	0.13(3.89)***	0.12(3.55)***	0.08(2.29)**
log(MDM)		0.04(3.03)***			0.05(3.53)***
DLG			-0.004(-0.47)		-0.01(-1.40)
DPE				-0.003(-0.64)	-0.005(-0.95)
R ²	0.52	0.58	0.53	0.51	0.58
총 관측치 수	172	172	172	172	172

주: 1) PGDP는 실질 1인당 GDP, OAG는 고령인구비율, UNE는 실업률, TRD는 무역 개방도, MDM는 선거지역의 크기, DLG는 좌파 정부의 연도별 더미, DPE는 선거 전연도의 연도별 더미를 의미함.

2) 괄호 안의 수는 t-값을 나타냄.

3)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양(+의 값이며, 그 탄력성은 0.04~0.05이다. DLG와 DPE 추정계수들은 <표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PR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추정결과로부터 PGDP를 제외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사회보호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는 MDM만이 사회보호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와 <표 1>의 예상된 효과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예상된 효과와 추정결과 비교

	요 인	예상된 효과	측정치
경제사회적 요인	소득수준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
	고령화 정도	+	대체로 +
	실업률	+	+
	세계화 진전	?	+
정치적 요인	선거제도(비례대표제)	+	+
	정부의 형태(좌파 정부)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
	선거의 유무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

주: '예상된 효과'에서 (+)와 (?)는 각각 사회보호 지출과 그 결정요인 간에 양(+의 관계 및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이론 혹은 실증적 결과가 존재함을 나타냄. '추정결과'에서 (+)는 사회보호 지출과 그 결정요인 간에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음을 의미함.

표 5. 정치적 영향의 Wald 검정

가 설	〈표 2〉Pooled LS 사용		〈표 3〉SURE 사용	
	F-통계치	P-값	F-통계치	P-값
$\beta_1+\beta_2+\beta_3=0$	2.17	0.1411	3.87	0.0508
$\beta_1+\beta_2=0$	9.02	0.0031	5.34	0.0221
$\beta_1+\beta_3=0$	2.96	0.0873	9.22	0.0024
$\beta_2+\beta_3=0$	0.31	0.5783	3.13	0.0789

<표 4>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당초 정부의 형태, 즉 좌파 정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사회보호 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추정결과 좌파 정부의 추정계수는 전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당초 예상에서 그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던 소득수준과 선거의 유무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양(+) 혹은 음(-)의 영향을 전혀 판별할 수 없었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세 가지 정치적 요인들이 동시에 SP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Wald 검정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치적 요인들이 SPR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Wald 검정 결과는 추정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MDM과 DLG 추정계수의 합과 MDM과 DPE 추정계수의 합이 영(0)이라는 가설(즉 $\beta_1+\beta_2=0$ 과 $\beta_1+\beta_3=0$)에 대해서는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전통적인 유의수준에서 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DM, DLG, DPE의 세 추정계수의 합이 영(0)인 가설(즉 $\beta_1+\beta_2+\beta_3=0$)과 DLG와 DPE 추정계수의 합이 영(0)인 가설(즉 $\beta_2+\beta_3=0$)에 대해 SURE를 사용한 경우에는 10% 유의수준에서 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Pooled LS를 사용한 경우에는 10% 유의수준에서 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Wald 검정 결과가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치적 요인이 SPR에 다소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제도가 SPR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적 요인으로 선거제도는 다른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선거제도는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므로 쉽게 변동하지 않는 속성이 있으며, 정부의 형태나 선거의 유무에 비해 정치인의 선호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통치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선진 복지국가에서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제도는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치인들의 일시적인 선호의 변화는 사회보호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V. 맺음말

최근 들어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호 지출과 관련된 실증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분야의 연장선상으로 OECD 국가의 1995~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호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 비해 최근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한 국가의 사회보호 지출의 정도는 '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 지출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는 사회보호 지출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사회적 요인 혹은 정치적 요인을 분리하여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 고령화 진전이 빠르거나 무역 개방도 혹은 실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보호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 OECD 국가들이므로 소득수준의 추정계수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선거제도, 즉 평균 선거지역의 크기(MDM, '한 국가의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평균수'로 정의)가 큰 국가일수록(MDM이 큰 값을 나타내는 국가일수록 비례대표제와 결합) 사회보호 지출의 상대적 중요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형태와 선거의 유무는 사회보호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비록 입법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사회보호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영향은 다른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두 변수 혹은 세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Wald 검정에서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사회보호 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의미 있는 실증적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좌파 정부의 연도별 더미변수(정부의 형태)나 선거 전년도 연도별 더미변수(선거의 유무)가 사회보호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에서와 같이 비교적 통치체계의 효율성이 높은 국가에서 재정지출의 구성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인들의 선호는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과 재정정책의 결정 간의 관련성에 대해 심층적이고도 보완적인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한 국가의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별 재정지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어진 재원으로 사회보호에 대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논의를 한 국가에 한정하여 똑같이 적용시켜 분석할 수 있다. 즉 한 국가에서의 많은 연도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 특히 정부의 형태나 선거의 유무 등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향후의 좋은 연구과제이다.

황진영은 Vanderbilt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불평등, 경제-사회적 정책, 부패, 교육 등의 정치경제학 관련 주제들이며, 현재 다수의 재정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다(E-mail: jyh17@hnu.kr).

참고문헌

- 김의섭, 황진영(2006). 인구구조와 재분배적 재정지출. *경제학연구*, 54(1), pp.33~61.
- 류덕현(2008).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 분석. *재정학연구*, 1(1), pp.3~39.
- 박형수(2005).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재정포럼*, 104, pp.26~53.
- 전승훈(2006).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경제현안분석* 제7호: 국회예산정책처.
- 최준욱, 류덕현, 박형수(2005). 재정지출의 분야별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황진영(2007a). 사회보장지출의 변화 및 수렴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OECD 국가 간 실증분석. *대외경제연구*, 11(3), pp.285~308.
- 황진영(2007b). 복지재정정책의 국제 비교. *미래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6-04: 한국노동연구원. pp.55~101.
- 황진영(2005).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한남대학교 출판부.
- Austen-Smith, D. (2002). Redistributing Income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1235~1269.
- Baily, S. J. (2004). *Strategic Public Finance*: Palgrave.
- Beck, T., Clarke, G., Groff, A., Keefer, P., Walsh, P. (2001). New Tools in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World Bank Economic Review*, 15, pp.165~176
- Castles, F. G. (2004).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Congleton, R. D., Shughart, W. (1990). The Growth of Social Security: Electoral Push or Political Pull. *Economic Inquiry*, 28, pp.109~133.
- Dang, T., Antolin, P., Oxley, H. (2001). Fiscal Implications of Aging: Projections of Age-Related Spending. *OECD ECO/Working Paper*, 31.
- Dreher, A. (2006).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on Taxes and Social Policy: An Empirical Analysis for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 pp.179~201.
- Esping-Anderson, G. (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rris, J. S., West, E. G. (1996). Testing Theories of Real Government Size: U.S. Experience, 1959~89. *Southern Economic Journal*, 62, pp.537~566.
- Garrett, G., Mitchell, D. (2001). Globalization, Government Spending and Taxation in the OEC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9, pp.145~177.
- Heller, P. S., Diamond, J. (1990).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overnment Expenditure Revisited: The Developing Countries: 1975~1986. *IMF Occasional Paper No. 69*.
- Hicks, A. M., Swank, D. H. (1992). Politics, Institutions, and Welfare Spending in Industrialization Democracies, 1960~82.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pp.658~674.
- Milesi-Ferretti, G. M., Perotti, R., Rostagno, M. (2002). Electoral Systems and Public Spend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pp.609~657.
- Nordhaus, W. D. (1975).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pp.169~190.
- OECD. (2006).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 Potrafke, N. (2006). Political Effects on the Allocation of Public Expenditures: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Discussion Papers*, 653, DIW Berlin.
- Preston, S. (1984). Children and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21, pp.435~457.
- Rieger, E., Leibfried, S. (2003). Limits to Globalization: *Welfare States and the World Economy*: Blackwell Publisher.
- Rhodes, M. (1998). 'Subversive Liberalism': Market Integration, Globalisation, and European Welfare States. in Coleman, W., Underhill, G. (eds.), *Regionalism and Global Economic Integration: Europe, Asia and Americas* : Routledge.
- Rogoff, K., Sibert, A. (1988). Elections and Macroeconomic Policy Cycl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5, pp.1~16.
- Roseveare, D., Leibfritz, W., Fore, D., Wurzel, E. (1996). *Aging Populations, Pensions Systems and Government Budgets: Simulation for 20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 Schulze, G., Ursprung, H. W. (1999). Globalisation of the Economy and the National State. *World Economy*, 22, pp.295~352.
- Tavares, J. (2004). Does Right or Left Matter? Cabinets, Credibility and Fiscal Adjustmen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pp.2447~2468.
- Turner, J. A. (1984). Population Age Structure and the Size of Social Security. *Southern Economic Journal*, 50, pp.1131~1146.
- Verardi, V. (2005). Electoral Systems and Income Inequality. *Economics Letters*, 86, pp.7~12.
- Wagner, A. (1958). Three Extracts on Public Finance (1883). in Musgrave, R. A., Peacock, A. T. (eds), *Classics in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acmillan.
- World Bank. (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 CD-ROM, Washington DC.

Socio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Jinyoung Hwang
(Hannam University)

Using cross-section of 20 OECD panel from 1995 to 2003,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Among the socioeconomic factors,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 of total), unemployment (% of total labor force) and trade openness ((export+import)/GDP)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 of government expendit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mean district magnitude is the only variable among all political factors that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mplying that the importance of social protection increases when the degree o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s increases.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are less important than those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n the sample of OECD countries.

Keywords : Sequential Poverty Dominance, Poverty Measurement, Heterogenous Households, Household's Equivalence Scale.

2009년 제29권 1호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인쇄일 | 2009년 6월 26일

발행일 | 2009년 6월 30일

발행인 | 김용하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 02-380-8000

홈페이지 | <http://www.kihasa.re.kr>

제작 | 예원기획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Kwon, Hyuk-jin** The Problem of Poverty Evaluation of Heterogenous Households Based on SPD (Sequential Poverty Dominance)
- Jinyoung Hwang** Socio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 In-Young Jung** Explain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Social Policy in Korea: The Cas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Um, Ki-Wook** A Study of Social Welfare Rights for Permanent Resident in Japan
- Sin, Yeong-jeon | Son, Jeong-in**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 Using the 1st and 2nd Korea Welfare Panel Data
- Shin, Hosung | Chung, Kee Hey | Yun, Simon | Lee, Suehyung** Climate Change, Food-borne Disease Prediction, and Future Impact
- Seok, Jae Eun** The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in the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 Samsung Han | Sungwook Kang | Wangkeun Yoo | Young Gyu Phee**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 YunKyung Lee** Factors of Long Term Care Service Use by the Elderly
- Kyunjick, Lee** The Effect of a Market Orientation on the Performance of the Long-Term Care Facilities